

지난 10년간 원전 멈춤 사고 86건

지난 10년 간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멈춤 사고 86건 중 방사능 외부 누설이 2차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광 한빛원전에서만 외부 누설이 발생해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당 당대변인(비례대표) 의원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원전사고건수 125건 중 원자로 정지 사고가 86건이었다. 원자로 정지 사고 중 2건은 방사

한빛원전서만 방사능 누설 2건 "방사능 관리 체계 개선 필요"

능 누설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누설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2008년 5월15일과 2014년 10월17일에 발생했으며, 외부로 누출된 방사능은 '환경 위해 방지 기준(0.05mSv)'에는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기계 폐기물 처리계통 연결 배관(응축수 배수밸브)의 비정상 개방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

2014년의 경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정비를 위한 출력 감발 중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면서 누설됐다.

신 의원은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보고된 건수(125건)를 제외한 사고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주부부차인 원안위가 원자로 정지와 같은 중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누설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외부 누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방사능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보험사기로 수억 타낸 한방병원장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아프지 않은 이들을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한방병원장 한모(46)씨를 구속하고, 의사 김모(86)씨와 원무과장 정모(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한씨의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보험범죄 방지 특별법 위반·사기)로 환자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1억원을 받아 챙기고, 각자 가입한 보험사에서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브로커 또는 다른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 외출·외박도 자유롭다'고 환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병상 수를 48개로 신고해놓고 진료기록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입원을 반복한 이들은 경찰에 "사우나 또는 다른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보험 사기 동참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원 브로커들이 가져 환자 1명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퇴거 요구에 격분 50대 여관 방화미수범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주불방화미수)로 양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15분께 광주 북구 A(69·여)씨가 운영하는 여관 카운터와 입구에 휘발유 41 중 21 가량을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1년 전부터 여관에 투숙해온 양씨는 퇴거 요구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잤을 행패를 부려오던 양씨에게 주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경찰에 "밤을 빼달라는 말에 화가 났다. 술에 취해 휘발유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계좌로 불법 환치기 외국인 남녀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주고 한화 140여 원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송금 한 외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을 붙잡아 베트남 출신 탐 모(37·여) 씨를 외국인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함께 붙잡힌 판 모(33)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탐 모 씨는 A 은행에 외국인의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개설하고 약 100여 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판 모 씨는 약 40여 원을 송금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신원을 수사하던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급여를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마약풍선 상습 판매 20대 구속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을 상습적으로 판매해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벌룬을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판매한 A(25)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터넷에 '해피벌룬 판다라'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00여 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만8670개를 판매해 554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커서비스를 이용해 해피벌룬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국 대학교 절반이상 등록금 카드로 안받아

전국 대학교 가운데 절반 가량의 대학교는 여전히 등록금 카드결제 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중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향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각종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능한 곳은 모두 20곳이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2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방식을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0%)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주해진 연탄공장. 추위전 날씨가 연탄주머니가 늘어난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연탄공장에서 직원들이 연탄을 트럭에 옮기고 있다.

교원 5명중 4명 "학폭위,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교원 5명중 4명은 학교별 폭력 전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9.4%는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86.4%) 교원의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78.5%), 고등학교(71.0%)순이었다. 경력별로는 11년

~20년차 교원(86.5%), 21~30년(80.1%), 10년 이하(76.8%), 31년 이상(74.7%) 순이었다.

반면 "학폭위 이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1%였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학폭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총은 분석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학폭위 운영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학부모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8.6%는 "과거에 비해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사실상 모든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한 셈이다. 교사(84.4%)보다는 교장(감)(92.0%)이, 경력이 많은

수교 더 어렵다고 답했다. 재직기간 별로 보면 10년 이하 75.0%, 11~20년 84.3%, 21~30년 87.9%, 31년 이상 87.5%였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31.3%는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데 따른 교권의 상대적인 약화"를 꼽았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체벌 전면 금지, 평가권 약화 등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증가(12.8%) 등이 뒤따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 허용 기준 마련 여부에 대한 질문에 69.1%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을 통해 합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80.3%)였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